

[노동법 개악 못막으면 끝장난다!] ③

미리 알려주고 투쟁해라?!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 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 ②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 ③ 쟁의행위 사전 통보! 찬반투표 엄격하게!
- ④ 산별노조 간부 사업장 활동 금지!

경총, 자유한국당, 민주당, 경사노위 한마음 한뜻
경총이 주문하고 자유한국당이 법안으로 만들고,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수용하고 민주당은 승인하려고 한다. 노조법 개악에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다. 지금도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너무 많이 침해하고 있고, 특히 파업에 대해서는 수많은 제약을 걸어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법 개악은 파업 한 번 하기 때

우 어렵게 통제하려고 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만들고, 쟁의행위 등 노조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용자 손바닥 안에서 투쟁하라는 것이다.

사용자 손바닥 안에서 투쟁해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노조법 개악안을 보면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때 파업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파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투표하고 4주가 지나면 파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파업기간을 사전에 공고하라는 것은 사용자에게 미리 우리 계획을 다 알려주고 파업하라는 것인데, 파업의 효과를 대폭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까지 더하면 아주 가관이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노조활동 시에 사전에 사용자에게 활동 목적, 시기, 장소, 인원 수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파업을 비롯한 모든 노조활동을 사용자가 미리 다 알고 있게 된다. 결국 노조는 사용자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다.

총파업 확실하게 준비하자!

국회가 난장판이라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지만, 언제든 열리기만 하면 노조법 개악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지부는 4월 임시국회 대응투쟁부터 계속해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 지회 조합원 교육, 확대간부 간담회, 선전전, 교육자료 배포, 시리즈 기획 대자보, 특별 선전물 발행 등 모든 투쟁의 초점을 총파업에 맞추고 있다. 지회별로 주1회 선전전, 현장순회도 진행 중이다. 국회가 노조법 개악을 논의하는 즉시, 언제든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확실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자!

